

## 영토교육 비판과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리교육의 방향성 모색

Searching for an Educational Solution to Territorial Conflicts in East Asia: From  
Territory Education to an Alternative Education on East Asian Geography

박배균\*

이 글에서 필자는 최근 영토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각되고 있는 영토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영토분쟁의 상황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영토교육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리교육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특히 기존의 영토교육론은 민족/국가주의적 성향, 유기체적 국토개념과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적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배재와 포섭의 속성과 영토적 배타성을 강화하여 영토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긴장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문제제기 했다. 최근 이러한 민족/국가주의적 영토교육론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적 애국주의, 비판문식성 교육, 초국가적 시민양성 등에 초점을 두는 영토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논의들 역시 영토교육의 틀 속에 갇혀 있는 한 민족/국가주의와 영토적 배타성의 논리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영토교육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는 영토교육을 넘어서 지리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자는 1) 관계론적 장소개념을 지리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 2) 국가의 틀을 넘어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지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어: 영토교육, 동아시아 지리, 장소, 영역성, 민족주의, 영토분쟁

## 1. 서론

최근 센카쿠 열도와 독도를 둘러싼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간의 영토 분쟁이 심각해지고, 각 국가 내부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고양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적 정세가 심상치 않게 급변하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경제적·정치적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고, 이는 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쟁으로 향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동북아에서 냉전 이후 최고 조의 긴장의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동북아의 국제정세는 중등교육의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 동북아 각국에서 영토교육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독도를 둘러싼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한 이후,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2005년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이어 2006년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표시하게 했다. 더 나아가,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09년 12월 25일 발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의 땅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기할 때 마다 독도 문제를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왔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독도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영토와 관련된 주요 국가적·사회적 쟁점으로 인식하여 특별 수업을 실시하기도 했다(이하나, 조철기, 2011: 333).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중등교육 전문가들은 최근 5년여 동안 영토교육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내용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들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영토교육의 필요성, 방향성, 그리고 내용적 구성 등을 연구한 논문들의 수가 지난 5년여 동안 지리교육 및 사회교육 관련 학술

지에 급격히 증가했다.<sup>1)</sup> 본 논문은 장소, 영토, 영역성에 대한 지난 20여 년간의 비판지리학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영토교육에 대한 이러한 시도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대립과 분쟁보다는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글로벌 시민의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대안적 지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 2. 영토교육의 기존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 민족/국가주의에 기반을 둔 영토교육

우리나라의 전통적 중등교육 체계에서 영토교육은 따로 독립적인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지리교육 분야에서 국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루면서 영토에 대한 언급을 간헐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영토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독도와 간도 등을 둘러싼 한일, 한중 간의 영토분쟁이 불거지면서, 영토교육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영토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는 주변 국가의 보수적 민족/국가주의의 강화로 인해 영토문제가 촉발되었고, 그에 대한 방어적 기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민족/국가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적 결속력과 정체성 강화가 정치권과 여론을 통해 강하게 요구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은 처음부터 우리 국토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박선미, 2010: 26). 즉, 영토교육이 민족

1) 필자는 DBPIA를 통해 ‘영토’와 ‘교육’을 주제로 검색한 자료들 중에서 영토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수를 바탕으로 영토교육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영토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은 2005년까지 전무하다가 2006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논문 출판편수의 시간적 추이를 보면 2006년 1편, 2007년 3편, 2008년 3편, 2009년 0편, 2010년 4편, 2011년 4편, 2012년 4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2007년 이후부터 영토교육에 대한 논문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국가주의적 입장에 깊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대부분 민족/국가적 정체성과 이익의 발전과 추구에 영토교육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서태열(2009)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러한 사고를 잘 보여준다.

영토가 없으면 국가와 국민은 존재할 수 없으며, 영토를 잃은 국민은 국민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영토는 국민들에게 존립한 거처를 제공하고 생존을 위한 식량과 안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의 결속력의 근간을 제공하고 정치체계가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 국가생명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토교육은 국민의 국가의식과 영역의식을 길러주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정체성을 영토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문화정체성으로 나누어보면, 국민에 대한 교육은 영토정체성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영토에 대한 강한 애착과 애국심이 학생의 자아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서태열, 2009: 198).

즉, 영토는 국가와 국민의 존재를 위해 필수적인 공간적 근거이기 때문에, 영토교육은 국민들로 하여금 영토적 정체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에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련하여, 임덕순(2006: 11)은 영토를 국가의 3대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보면서, 영토가 주권정부 및 국민의 거처이자, 국민들에게 안식과 먹이를 제공하며 국가에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공간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서태열(2007: 11)도 이와 비슷하게, 영토가 국가와 민족의 경계에 대한 공간적 토대를 제공하고, 국가(민족) 공동의 삶의 터전으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물질 기반을 제공

하며, ‘우리’라는 감정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서태열(2009: 199)은 영토는 국가의 영역적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기 때문에, 영토는 국가의 존립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영토의 침해는 곧바로 국가주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 국가안보적 사안이라 보았다.

이처럼 영토를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적 기초라고 보게 되면, 영토에 대한 교육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임덕순(2006: 12)은 영토교육이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적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며, 자기나라의 지리·영토와 관련해서 정치·경제상의 진로를 생각하게 해주어 영토 수호, 보전에 일조하려는 의지를 갖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서태열(2009: 201) 또한 영토교육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여를 강조한다. 그는 영토교육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의 하나인 국토를 알게 하고, 우리 국토와 다른 국토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공유하도록 하여 국가(민족)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며, 우리 땅과 이웃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국가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영토교육이 국가/민족의식과 정체성의 함양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영토교육의 중요성을 국가의 관료, 정치인, 그리고 중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담론적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영토교육이 민족/국가주의에 기대어 민족/국가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기능적 필요를 바탕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으려 하면 할수록, 영토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정당성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가치는 국가 관료들과 정치적 지배엘리트의 이해와 필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그리고 국가를 뛰어넘는 인류 전체의 안녕, 공존,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즉, 자국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선의의 민족주의 교육은 필요할 수 있지만,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우월적인 민족/국가

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영토교육은 그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다(진시원, 2008: 447).

이와 더불어, 자본, 사람, 물자의 초국가적 이동과 흐름이 활성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경향 속에서 국가주권과 영토의 절대성에 대한 주장은 점차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교육의 영역에서도 민족/국가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가치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대신 세계 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이 주변 국가의 보수적 민족주의자에 의해 촉발된 영토 분쟁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차원에서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족/국민주의에 기대어 영토교육의 필요와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웃 나라의 도발에 대응하여 민족/국가주의에 기대어 영토의식과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여 이웃과의 갈등과 대결을 강화하기보다는, 이웃과의 평화로운 공존과 초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교육이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정당성을 얻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영토교육의 주창자들은 세계화 시대에도 국가라는 단위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국가를 중심으로 인류가 생활을 영위하는 한, 영토의 중요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서태열, 2009: 199), 영토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 2) 유기체적 영토관에 입각한 영토교육

영토교육에 대한 기존 논리가 지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영토를 만드는 행위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 내재된 본능 중의 하나로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영토교육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정치지리학에서 영역은 특정의 개인, 집단, 혹은 기관에 의해 점유된 지리적 공간의 일부로서, 경계를 통해 외부와 구분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Storey, 2001). 그런데, 이러한 영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영역을 점유하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어왔다. 하나는 생물학적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정치적 접근법이다.

생물학적 접근법은 생물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등에 의해 전통적으로 제시된 것인데, 영역을 만드는 행위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 내재된 본능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 넓이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모든 동물에 내재된 특징인데, 이 공간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영토를 지키고 또는 확보하려는 필요가 생기고, 또한 영토를 지키거나 확장하기 위해 공격과 폭력도 불사하는 영역적 행위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의 대표적인 사람은 인류학자인 로버트 아드레이(Robert Ardrey)인데, 그에 따르면 동물과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역적으로 행동하고, 특히 인간은 그들로 하여금 공간을 방어하도록 만드는 ‘영역적 책무(territorial imperative)’를 가지고 있다(Ardrey, 1967).

이러한 견해는 독일의 정치지리학자인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에게서도 발견되는데, 그는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을 두어, 국가의 확장과 팽창은 국가의 생존과 영토의 방어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torey, 2001: 25). 서태열(2009)은 영토교육을 논하면서, 라첼의 이러한 국가유기체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영토를 정의하면서 라첼의 생활공간(lebensraum) 개념을 적극 수용하는데, 라첼은 동식물의 유기체가 특정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집단도 특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투쟁하는데, 이처럼 인간을 비롯한 살아 있는 유기체가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지리적 영역을 ‘생활공간’이라 규정했다. 서태열(2009: 199)에 따르면, 라첼의 lebensraum은 유기체들이 생존을 위해 서로 투쟁하는 생존공간이고, 국가들 간에도 이 개념은 적용되어 영토는 유기체와 같이 작동하는 민족(혹은 국민)들이 서로 생존을 위해 다투는 생존공간이다. 영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영토교육에 대한 논의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서태열(2009: 198)은 영토를 국민들에게 존립할 거쳐, 생존을 위한 식량과 안식처, 그

리고 결속력의 근간을 제공하여 정치체계가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국가생명의 원천과 같은 생존공간이라 보면서, 이러한 영토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국민의 국가의식과 영역의식을 길러주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영토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동물의 예를 바탕으로 한 손쉽게 수긍될 수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결정론의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특히 골드(Gold, 1982: 48)는 “영역성은 본능의 맹목적인 작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인간 문제에 대해 문화적으로 야기되고 전파된 대답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그것의 규칙, 메커니즘, 상징은 오랜 시간을 통해 서서히 만들어졌고,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생물학적 접근의 결정론적 사고를 비판하면서, 영역적 행동을 야기하는 사회적·문화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영토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영토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는 행위는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 부과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폭력과 비인권적인 행동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정당화될 수도 있다. 라첼의 국가유기체론이 나치 독일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이용된 전례는 영토에 대한 유기체적 관점이 지니는 정치적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정치지리학자들은 인간의 영역적 행위를 인간이 아닌 생물들의 영역적 행위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영역성이 사회·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영역의 문제를 접근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로버트 색(Robert Sack)이다. 색(Sack, 1986)은 영역의 형성을 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지역을 경계 지우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함을 통해, 사람, 사건, 그리고 그들 사



이의 관계들에 영향과 통제를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바라본다. 이 관점에서 영역을 바라보게 되면, 영역을 만들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경계를 설정함을 통해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배제와 포섭을 행하고, 이 구분을 통해 권력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동기에 의해 영역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의 영역적 행위들은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으로 쉽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적 행위의 배후에 있는 동기, 권력관계, 그리고 그러한 영역적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판적 해석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속한 가족, 민족, 국가, 집단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당연시하고 정당화하던 다양한 영역적 행위들이 비판적 해석과 성찰의 대상이 되어 문제시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영토를 바라보게 되면, 민족/국가주의에 기대어 민족/국가 의식 함양, 영토적 정체성 고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토교육도 비판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영토교육은 국가 지배엘리트가 국가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국가 내부 혹은 외부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영토교육은 “영역성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이하나·조철기, 2011: 334)하려는 지배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적 가치를 정당화하기가 어렵게 된다.

### 3)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입각한 영토교육

최근 영토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영토교육을 장소적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서태열(2009: 200)은 영토를 개별 인간의 실존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바라본다. 그는 실존공간으로서 영토(국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

는 장소에 속하려는 욕구에 바탕을 두며, 하나의 장소로서 이해될 수 있는 국토(혹은 영토)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이고, 따라서 영토는 개인에 의해 실존적 공간으로 인지된다고 주장한다(서태열, 2009: 200). 즉, 인간은 장소에 속하려는 본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존공간으로서 영토 내지 국토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도 같은 중요한 실체라는 것이다. 영토를 실존공간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태열(2009: 200)은 영토교육 또한 인간 실존의 측면에서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현상학적 존재적 실체인 인간은 자신의 존재적 삶이 세계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과 일정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공간이자 생존공간인 영토에 대한 교육은 인간 존재적 차원에서 본질적인 것이 된다.

실존공간으로서의 영토개념은 장소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면서 더욱 구체화된다. 서태열(2009: 202)은 인간의 정체성이 공간과 장소와 깊이 결합된다고 보면서, 국가정체성이 장소나 영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다. 즉, 근대국가에 소속감을 지닌 국민의 존재와 그들이 지닌 국가정체성은 영토적 주권에 입각한 근대적인 영토인식을 매개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태열(2009: 204)은 영토교육이 영토에 대한 외부자성(outsideness)을 기르는 교육이 되기보다는 영토 속으로 들어가 체험하고 행동하면서 영토에 대한 내부자적 정체성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영토에 대한 교육이 영토를 그저 단순히 방문하고 국토공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면, 학생들에게 국토가 개인과 국민의 생활무대로서 존재하는 실재감과 영토와 장소에 대한 유대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에 대한 유대감이 부족하면, 영토에서의 존재감과 영토적 정체성도 상실되고 국토(영토)에 뿌리 내리기도 실패하게 되어서 영원한 국외자로 남게 될 수 있다.

영토교육에서 영토에 대한 내부자적 정체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주장은 인본주의 지리학자인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가 제

시한 장소에 대한 내부자성과 외부자성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서태열(2009: 205)은 장소의 본질은 ‘외부’와 구별되는 ‘내부’의 경험을 규정하는 데 있으므로, 어떤 장소 안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소속된다는 것이고 그곳과 동일시되는 것이며, 더욱 깊이 내부에 있게 될수록 장소와의 동일시, 즉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더욱 강해진다는 렐프(Relph, 2005: 116)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하나의 장소로서 영토를 볼 때, 영토교육을 통해 개인이 도달하게 되는 바람직한 상태를 내부자성이라고 주장했다. 즉, 영토교육은 영토에 대한 사실과 지식을 전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토에 대한 애착, 영토에 대한 호기심, 영토에 대한 지식, 영토에 대한 감정과 관련된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서태열, 2009: 206).

영토교육에서 이러한 장소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민족주의적 관점의 영토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이 완화된 보다 긍정적인 방식의 영토교육이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박선미(2010: 26)는 국가 공동체 내부의 결속력과 외부에 대한 배타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관점의 영토교육과 달리, 장소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영토교육은 장소 ‘내부’의 경험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장소적 정체성 형성이 영토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박선미(2007)에 따르면,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 교차되면서 개인의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형성된 장소성은 상호주관적으로 결합되어 공동의 정체성으로 발전된다. 이렇게 형성된 특정 지역에 대한 장소성은 나름의 내적 견고함을 바탕으로 시간이 흘러 외적인 변화를 겪으면서도 지속될 수 있다(박선미, 2010: 26). 따라서 장소성 관점에서의 영토교육은 민족주의적 영토교육과 달리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감성적 참여와 개입을 수반하는 관계맺음을 통하여 뿌리 내림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소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영토교육은 민족/국가주의적 영토교육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한 영토교육의 대안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장소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이해로 인해 장소와 영토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국가주의적 영토교

육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본질주의적 장소관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다.

본질주의적 장소관이란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장소에 대한 이해방식을 지칭한다. 현대 지리학에서 장소에 대한 연구는 현상학, 실존주의 철학 등에 기반을 둔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일상세계에서의 경험과 느낌에 바탕을 둔 장소에 대한 전체론적 이해를 추구하면서, 장소의 의미와 장소를 둘러싼 문화적 감수성을 무시하는 공간과학 혹은 실증주의적 공간연구로부터 장소를 구출하려 노력했다(박배균, 2010: 502). 하지만, 이들에 의해 추구된 장소에 대한 연구는 장소라는 것이 본래부터 그곳에서 뿌리내려져서 주어지고, 지속되는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소에 대한 본질주의적(essentialist)이고 배타적인(exclusive) 관점을 발달시켰다. 렐프(Relph, 2005)의 「장소와 장소상실」은 이러한 주장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글이다. 그는 여기서 모든 장소들은 나름의 독특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지니고, 사람들도 이들 장소들에 대해 나름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즉, 장소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그 곳에서 뿌리내려져서 형성된 나름의 고유하고 진정성(authenticity)이 있는 가치와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렐프는 이러한 장소에 뿌리내려진 가치와 정체성이 근대적 산업화의 영향으로 위협받고 사라지면서 장소의 상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한탄스럽게 주장한다.

렐프에게 장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분리된 내부를 창조하는 것이다(박배균, 2010: 503).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인간들이 장소에 대해 가지게 되는 내부자성과 외부자성을 구분한다. 렐프는 외부에서 장소를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여행자가 되어 멀리서 마을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내부에서 어떤 곳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이 장소에 둘러싸여 그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렐프는 장소를 이해할 때 외부-내부의 구분이라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이원성이 인간들의 생활공간 경험에 기초가 되며 장소의 본질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이분법을 바탕으로 장소는 근대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추상화된 공간이라는 개념과는 대비되어, 사람들의 향수와 노스텔지어, 추억, 공동체적 감수성 등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또한 이러한 장소들이 지나는 원초적이고 본래적인 의미와 속성들이 근대화, 세계화 등과 같은 변화의 와중에서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즉, 장소에 내재된 본질적 속성과 진정성이 근대화, 세계화 등과 같은 외부적 힘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의 본질적인 고유성과 의미,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장소에 대한 본질주의적 이해방식은 사람들의 향수, 노스텔지어, 추억, 공동체적 감수성을 자극하여 근대화와 세계화와 같은 힘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장소와 마을을 지키고 복원하자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결합되기도 한다. 영토교육의 차원에서 민족/국가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영토교육보다 국민들이 나고 자란 장소와 국토의 고유성과 진정한 장소성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는 영토교육이 일견 사회적으로 더 정의롭고 교육적으로도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장소에 내재한 진정한 고유성과 본질적 속성이 있다는 이러한 사고는 장소를 영역화하고 영토적 배타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기획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본질주의적 장소 개념은 최근 많은 지리학자들에 의해 비판되어왔다. 이들 비판의 핵심적 논점은 장소성이란 것이 본래부터 특정의 장소에 뿌리내려져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구성되며, 이 사회적 구성의 과정은 복잡한 권력 관계와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동원을 바탕으로 한 정치·사회·문화적 투쟁의 과정이라는 것이다(박배균, 2010: 504). 즉, 인본주의 지리학은 장소의 형성과 장소적 경험을 구조화하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권력 관계를 폭넓게 이론화하지 못했다고 비판된다.

질리언 로즈(Rose, 1993: 51)에 따르면, 인본주의 지리학은 모든 사람이

나 현상은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 해석될 때라야 비로소 의미를 지니고, 이러한 인문성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장소감에 대한 욕망 역시 보편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장소를 생각과 느낌을 통해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완벽한 인문성은 내부인이라는 소속감을 지녀야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장소감에 대한 인본주의 지리학의 이러한 설명방식은 권력관계, 이데올로기, 문화적 제약 등이 장소감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것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논리이다(박배균, 2010: 504). 많은 경우, 특정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은 그들이 처한 권력관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문화적 편견, 이데올로기적 지향 등에 깊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본질주의적 장소관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즉, 본질주의적 장소개념은 장소에 대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체성과 감정이 장소의 ‘진정한 내부자성’이라는 신화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묵살되고 단 하나의 정체성과 감정으로 통일되도록 강요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용하면서 장소성을 강조하는 영토교육을 보게 되면, 그것이 지닌 잠재적 위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토와 영토에 대한 내부자적 정체성을 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 국토와 영토의 본질적 장소성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누구에 의해 규정된 것인가? 마치 외국인 이주자들이 출현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출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김치가 맛있다고 칭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의 국토와 장소에 대해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와 감정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모든 국민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믿고 외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지향점인가? 필자는 장소의 내부를 외부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내부에 속한 사람, 사물 등을 배제와 포섭의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시도를 ‘장소의 영역화’라고 이해한다(박배균, 2010: 508). 그렇다면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의거하여 국토와 영토에 대해 본질적인 진정한 장소적 고유성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영토교육은 장소를 영역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족주

의와 국가주의는 사람들을 특정한 영토에 소속감을 가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영역적 이데올로기이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바탕에는 해당 영토에 고유한 장소적 속성이 있다는 신화적 믿음이 놓여 있다. 따라서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입각한 영토교육은 민족/국가주의에 의거한 영토적 배타성 논리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 3. 동아시아 평화화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리교육 모색

#### 1) 대안적 영토교육을 위한 시도들

영토교육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모두다 민족/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영토적 배타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민족/국가주의적 영토교육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논의들을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 (1) 시민적 애국주의를 지향하는 영토교육

박선미(2010)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영토교육이 영토문제에 갇혀 있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배타성을 내포한 영토문제에 치중하는 편협된 영토교육을 뛰어넘어야 함을 역설한다. 박선미(2010: 3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은 국토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중점을 두는 국토에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토교육은 조국과 영토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자연적이라는 것을 전제하다 보니, 자연적 사랑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편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영토문제에 치중하고 있어, 영토교육이 정치적 민족주의에 갇히게 된다. 또한 박선미(2010: 27)는 영토교육이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한 다른 공동체에 대한 배타적 공격성을 자극하게 되어, 그러한 공격성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을 길러주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박선미(2010: 33)는 민족주의적 애국심 교육을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영토교육 목적으로 인식해왔던 과거의 전통이 더 이상 영토교육의 설득력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주의적 애국심에 기초한 영토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박선미(2010: 28)는 시민적 애국주의에 기초한 영토교육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허버 마스가 제시한 시민적 애국주의 개념을 차용하는데, 박선미(2010: 28)에 따르면, 시민적 애국주의는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분리하고, 헌정적 애국심에서 특정 국가의 자연·역사·문화적 조건에만 국한된 특수적 요소보다는 모든 법치국가가 지니는 보편적 요소를 더 강화하여, 민족주의에 포섭된 애국심이 갖는 배타성을 극복하고 헌정적 공화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세계화와 탈영토화 시대에 추구해야 하는 애국은 자국민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차이점을 강조하거나 그들을 배척하기보다는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는 시민적 애국주의이다. 이를 바탕으로 박선미(2010: 28)는 시민적 애국주의를 지향하는 영토교육은 변증법적 사고를 통한 주체적 자기 인식을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의사소통하는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의 사회구성원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영토교육은 “배타적 민족주의가 갖는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국가와 그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담보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영토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며 민주적 절차와 포용적 합의에 근거하여 데모스를 민족 구성원 밖으로 확장시키려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박선미, 2010: 28).

## (2) 비판문식성(critical literacy) 형성을 위한 영토교육

남호엽(2011: 375)은 외부의 침탈에 대응하는 애국주의 노선의 영토교육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양시켜서 글로벌 시대의 영토교육 방향으로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비판문식성의 형성을 지향



하는 영토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영토교육의 논리는 특정 영토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지향해서는 안 되고, 경합이 되는 영토와 장소에 대해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비판문식성 형성의 관점에서 합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남호엽, 2011: 375).

남호엽(2011: 373)은 영토를 사회-정치적 과정의 결과물로 보는 색(Robert Sack)의 영역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영토를 공간 전략의 산물로 바라본다. 그에 따르면, “영토는 국가 권력에 의해 근대 사회에 만들어진 사회질서로서 영역성의 현실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누군가에 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추구되고 있는지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영토의 형성과정은 영역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견지에서 해체적인 독해의 대상인 것이다(남호엽, 2011: 373). 그런데 영토 만들기 과정은 국경의 무력적인 점유 이외에도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의 작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다양한 국면과 맥락들에서 수행되는 담론적 실천과 관행을 통해 재현된다.

특히 지정학적 비전의 재현이 중요하다. 남호엽(2011: 372)은 데이킨크(Dijkink, 1996)를 인용하여, 지정학 비전을 자신의 장소와 다른 장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정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서, 이러한 지정학 비전은 자신의 장소가 안전한지(또는 불안한지), 혹은 이익을 얻는지(아니면 불이익을 얻는지) 등에 대한 느낌을 포함하여, 장소 구성원에 대해 특정의 집단적 임무를 부과하거나, 외교 전략에 대한 특정 사고방식을 촉발시킨다고 했다. 남호엽(2011: 373)에 따르면, 영토의 형성과정은 매우 복합적인 실행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지정학적 비전의 형성과정이고, 따라서 영역화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재현의 지정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남호엽(2011: 376)은 지정학 비전의 설정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해체적으로 독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비판문식성의 형성이 글로벌 시대 영토교육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문식성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와 권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에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지정학 재현의

다차원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영토를 둘러싼 상이한 공간전략과 지정학 비전들을 상대화시켜 그들 사이의 관계를 힘의 역학 구도 속에서 보게 만들어, 그러한 역학 구도에 대한 해체적 독해와 재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글로벌 시대 영토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이라는 것이다.

### (3) 초국가적 주체 형성을 위한 영토교육

남호엽(2011: 376)은 글로벌 시대 영토교육은 비판문식성 함양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주체의 형성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민족주의의 재개념화가 불가피한 글로벌 시대에 민족적 타자를 상정하고 내부를 순화시키는 방식으로 영토교육을 위치 지을 경우, 영토교육은 민족/국가주의자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영토교육 그 자체가 초국가적인 주체의 형성이란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호엽(2011: 376)은 영토 관련 사안을 국민국가의 배타적 영역성에 기초하기보다는 초국가적인 관계 구도 속에 위치 지우자고 주장한다. 즉, 독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사안들을 국경을 뛰어넘어 활동하고 존재하는 초국가적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국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초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삶을 지향하는 시민성의 함양을 통해, 동아시아 각 국가의 정치엘리트의 관점보다는 평화의 무대로서 동아시아를 사고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를 중심으로 화해와 협력,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교육적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 2) 영토교육을 넘어 ‘동아시아 지리’교육의 대안적 재구성을 향해

앞에서 제시된 대안적 영토교육의 구성을 위한 시도들은 민족/국가주의에 기초한 영토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학문적 성찰의 결과물들로서, 영토교육론뿐만 아니라 지리교육론 전반의 학문적 발전

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지리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시도들이 던져주는 매우 훌륭한 교육적 시사점과 학문적 가치가 여전히 그들이 붙들고 있는 ‘영토교육’의 틀 때문에 평가절하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사실 ‘영토교육’이란 것 자체가 최근 영토분쟁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 새롭게 대두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국가 정치엘리트의 공간전략과 정책적 필요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따라서 ‘영토교육’이란 틀에 머무는 것이 과연 민족/국가주의적 영토교육을 뛰어넘어 영토적 경쟁과 갈등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세계시민의 양성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교육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영토교육’을 대안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지리교육’ 자체를 초국가적 주체와 세계시민의 양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영토갈등의 상황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인 방향이 아닌가 제안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절에서 필자는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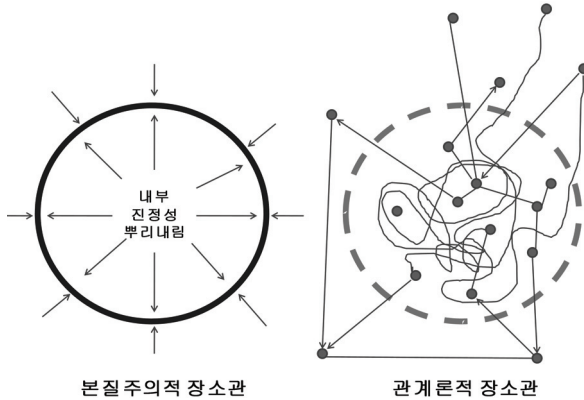
#### (1) 관계론적 장소관의 필요성

그간 우리나라의 지리교육에서 장소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1970, 1980년대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제기된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기반을 두어왔다. 앞에서 이미 논했듯이, 본질주의적 장소개념은 장소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여 장소 내부의 진정성과 고유성을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장소를 구성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세력과 담론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권력투쟁을 등한시했다. 그 결과로 본질주의적 장소개념은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장소의 영역화와 민족/국가주의적 영토교육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위험성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주의적 장소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장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1980년대 이후 서구의 비판지리학자들은 본질주의적 장소 개념을 뛰어넘는 대안적 장소개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왔다. 이들은 인본주의 지리학자들과는 달리 장소는 어느 곳에 뿌리내려져서 진정하고 고유한 속성을 지닌 공간이기보다는 일상 속에서의 반복적인 사회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고 재구성되는 것으로, 그리고 장소가 지니는 의미, 혹은 장소성은 장소가 지닌 본질적 속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 안에서, 그리고 그 장소를 통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관계 속에서 갈등과 투쟁을 동반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박배균, 2010: 505). 이처럼 장소를 그 공간에 뿌리내려지고 고유한 특성의 속성을 부여하는 곳이 아니라, 장소 안에서, 혹은 장소를 통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만남, 상호작용, 실천, 수행을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곳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장소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비본질주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장소는 특성의 정체성을 선형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창조적 생산을 위한 원재료와 창조적 사회적 실천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하는 곳이다(박배균, 2010: 506). 이런 측면에서 장소는 뿌리내려진 고유성을 지닌 안정된 존재론적 사물이라기보다는 개방성과 변화로 특징지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Cresswell, 2004: 39).

관계론적 장소개념은 도린 매시(Massey, 1997)에 의해 제기된 ‘장소에 대한 글로벌한 감각(global sense of place)’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매시는 장소의 개념을 더욱 개방적인 것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면서, 장소에 대한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의 본질주의적 이해방식과 달리, 장소를 뿌리내림, 고착성과 같은 범주를 중심으로 이해하지 말고, 흐름, 이동, 연결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하자고 주장한다. 장소에 본래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던, 원초적이고 진정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신 장소는 오랜 기간의 역사 동안 그 장소를 짧게 혹은 길게 머물다 지나간 사람들의 이동과 흐름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한다는 것

<그림 1> 본질주의적 장소관과 관계론적 장소관의 차이



자료: 박배균(2010: 507).

이다. 이러한 인식론에 따르면, 1년, 10년, 100년, 혹은 1,000년 전에 이동해온 사람들, 혹은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에게 의해 장소는 만들어져 왔고, 또 앞으로 또 있을 또 다른 이동과 스쳐 지나감을 통해 장소는 만들어질 것이며, 그렇게 장소는 외부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결국 장소는 결코 내부-외부의 구분에 기반을 두어 고정된 영역이 아니며, 열려 있고 계속하여 만들어져 가는 역동적인 사건인 것이다(박배균, 2010: 507).

본질주의적 장소관과 관계론적 장소관 사이의 차이는 <그림 1>을 통해 잘 보인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장소는 뚜렷하게 경계가 주어진 곳이며, 그 경계를 중심으로 그 안쪽은 내부, 그 바깥은 외부로 구분이 되며, 내부에 해당되는 행위자들만이 그 장소에 뿌리내리면서 그 장소에 대해 진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관계론적 장소관에서 장소의 경계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경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소의 경계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어 그 장소에 대한 출입의 제약이 강하지 않고, 따라서 내부와 외부의 구분도 약하다. 그리고 장소는 그곳에 뿌리내리고 진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진 내부자들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의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다양한 힘과 행위자들이 쉽사리 이동하고 접촉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박배균, 2010: 508).

관계론적 장소관은 영토의 문제를 영역성과 사회-정치적 전략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관점과 잘 결합된다. 앞서 논했듯이, 영토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영토 만들기를 생물학적 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을 거부하고, 대신에 영토의 형성을 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 정치적 전략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 기초해보았을 때, 영토는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사용된 ‘영역화 전략’을 통해 안과 밖의 경계 지음이 뚜렷해진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치지리학에서 특정의 개인, 집단 혹은 기관에 의해 점유된 지리적 공간이 가시적이거나 혹은 비가시적인 경계와 울타리를 바탕으로 내부와 외부를 차별화하고, 배제와 포섭의 권력적 통제를 표출하는 장소가 되었을 때 이를 영역이라 부른다. 즉, 영역의 형성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1) 경계 만들기, 2) 그 경계를 중심으로 안팎을 구분하기, 3) 누구를 내부로 포섭하고, 다른 누구를 외부로 배제하는 통제행위이다(Delaney, 2013: vi). 이러한 성질을 지닌 공간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영역의 존재 방식은 근대국민국가를 통해 나타나는 국가의 영토이다. 17세기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영토적 주권의 개념이 등장했고, 이를 계기로 국가는 가장 공식화된 영역적 조직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배타적인 영역적 주권에 기반을 두어 국가라는 정치적 조직체의 영역성이 제도화되면서, 국가의 경계는 가장 공식화되고 가장 견고하게 구분된 경계선으로 자리 잡았고, 국민/민족(nation)은 사람들을 장소에 연결시키는 영역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역은 국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직접 연관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경계 지워진 다양한 형태의 영역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영역, 신체나 가정과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영역, 경찰의 수사관할권과

같은 행정적 경계, 기숙사 방 내부에서 룸메이트 사이에 만들어진 구획화된 공간, 고급아파트단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공간 등은 이러한 영역적 형태들의 예이다(Delaney, 2013: vii).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영역들은 장소의 특수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박배균, 2010: 509). 관계론적 장소개념에 따르면, 장소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과정과 행위자들의 다양한 수행(performance)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가 구성되고 표현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장소의 구성 과정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권력관계 속에서 그 장소의 경계성이 강조되고, 그 경계를 중심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여, 특정 세력들을 중심으로 특정한 방식의 사회관계와 특정한 성질의 대상들만을 그 경계 내부로 포함하고, 다른 것들을 배제하려는 행위가 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 장소는 영역적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즉, 장소의 영역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약하면 영역은 장소에 경계를 만들어 안과 밖을 구분하고, 그 경계 안의 성질, 의미, 가치, 권력관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장소의 배타성, 경계성이 극도로 심화되는 경우 나타나는 것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장소가 영역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장소 안에서, 그리고 장소를 통해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결합, 협상, 권력투쟁의 특성에 따라, 안과 밖의 구분과 영역적 배타성이 매우 낮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장소가 구성될 수도 있다. 즉, 시민들의 정치,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적 실천, 참여, 투쟁에 따라 영역화되지 않은 매우 개방적인 장소가 구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토적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보다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건설에 기여하는 교육을 원한다면 내외부의 구분과 영역적 배타성을 전제하는 본질주의적 장소개념보다는 보다 개방적인 장소의 구성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론적 장소개념을 지리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관계론적 장소관을 수용할 때에는 조심할 점이 있다. 관계론적 장소관이 강조하는 것과 같이 장소의 특성을 장소 안에서, 그리고 장소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와 흐름들의 유동성과 우발적 만남에만 초점을 두어 이해하게 되면, 장소를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 소지가 있다. 본질주의 장소개념에서처럼 장소를 특정의 고정되고 본질적인 속성과 정체성으로 환원하여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장소를 과도하게 관계성과 유동성에만 의존하여 바라보는 것도 문제다. 즉, 장소의 형성과정이 관계론적 장소관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과는 달리 완전히 유동적이거나 개방적이지는 않으며,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 속에서 특정의 방향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2가지 이슈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장소는 나름의 맥락적 인과성을 지니고 그로 인해 장소형성의 과정은 특정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장소에는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작동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 창발되는(emerging) 독특한 사회적 구조와 그로 인한 맥락적 인과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러한 맥락적 인과력은 경로의존성을 지녀서 그 장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관계들의 만남과 흐름의 방향을 조건 지우는 구조적 힘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장소의 맥락적 인과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계기는 특정의 장소에 ‘국지화된(localized)’ 사건들과 행위자들이 그들의 ‘지리적 근접성(proximity)’을 바탕으로 그들 간의 관계를 해당 장소에 ‘공간적으로 뿌리내리는 것(spatial embedding)’이다. 이러한 공간적 뿌리내림은 더 많은 사건과 행위자들이 그 장소를 중심으로 ‘국지화(localized)’하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과정의 누적적 결과는 ‘지역적 차별화(areal differentiation)’이다(Jessop, Brenner and Jones, 2008). 즉, 장소는 사건과 관계들의 공간적 뿌리내림과 국지화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맥락적 인과력을 지니고 이것이 장소적 고유성과 지역적 차별화를 유발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하지만 장소가 나름의 맥락적 인과성과 그로 인한 장소적 고유성을



지니기 때문에 장소형성의 과정이 특정의 방향성을 띠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소적 고유성은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이 찾고자 하는 그 장소의 원초적 진정성이자 본질과는 다르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장소의 맥락적 인과성은 특정한 시점에 해당 장소를 둘러싼 내외부의 다양한 힘들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형성된 국면적 조건에 불과하다. 즉, 장소를 둘러싼 내외부적 힘들의 상호작용 방식과 권력관계가 변하면 장소의 맥락적 인과력도 변화하며, 장소적 고유성과 지역적 차별화의 패턴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장소를 관계론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장소의 유동성과 관계성을 너무 과장해서 강조해서는 안 되고, 각 장소가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형성해온 나름의 맥락성을 인식하면서 장소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소의 사회적 구성과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힘이 존재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매시가 강조했듯이 장소는 장소 안팎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힘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재생산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의 구조 속에서 장소의 사회적 구성은 특정한 방향성을 띤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상호작용에 의해 촉발되는 장소의 영역화 경향에 주목한다. 하비(Harvey, 1982, 1985, 1989)는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본가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상이하고 모순적인 방법을 언급하는데, 하나는 남들보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더 효율적인 기업 조직을 만들어내거나, 자원, 인프라, 시장, 노동력 등에의 접근이 용이한 더 좋은 입지를 선택하여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확보해놓은 우수한 기술과 입지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강화하여 다른 자본가들이 이들 기술과 입지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신의 경쟁적 우위를 지속하려는 방법이다. 하비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순적인 관계가 궁극적으로 영역화된 정치를 등장시키는 조건이 된다(박배균, 2008: 63).

전자의 축적 전략이 공간적으로 표출되면, 자본의 끊임없는 이동성 추구와 그로 인한 자본주의 공간경제의 항시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후자의 축적 전략의 공간적 표현은 특정 장소나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활동, 기술, 사회적 관계, 소비패턴, 노동과정, 계급관계, 문화 등이 ‘구조적으로 응집된 시스템(structured coherence)’을 만들어 기존에 확보해놓은 우수한 기술과 입지의 이점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박배균, 2008: 64).

이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은 서로 모순적이어서, 특정 장소(예: 국가, 도시, 지역)에 형성된 ‘구조화된 응집’의 상태는 불안정한 자본주의 공간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주어지는 지속적인 불안정과 재구조화의 압력에 의해 끊임없는 와해의 위협을 받게 된다. 하비에 따르면, 이러한 지속적인 불균형과 위기의 국면은 해당 장소에서 조직된 ‘구조화된 응집의 시스템’에 의존적인 자본가와 노동자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다가오고, 이러한 장소의존적인 행위자들이 이 위기의 국면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영역화의 정치가 만들어진다(박배균, 2008: 64). 이들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의존하고 있는 ‘구조화된 응집’의 경향을 보호하고 지켜내어, 자기 지역(혹은 국가, 도시) 내에서 자본의 순환과 축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해당 장소가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영역적 이해와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계급적 차이를 뛰어넘어 초계급적인 영역동맹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구성된 영역동맹들은 새로운 자본이나 투자, 기술 등을 자신의 장소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국가, 도시, 지역 간의 경쟁과 갈등의 심화이다(Harvey, 1985; 1989). 즉,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장소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화된 응집을 지키기 위한 영역정치에 의해 지배되어 영역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비의 지적과 같이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구조하에서 국가, 도시, 지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역적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

재활동의 세계화, 탈영역화라는 이동성 증가와 그로 인한 자본주의 공간 경제의 불안정 심화라는 상황 속에서 국가, 도시, 지역들은 그들 장소에 고착화된 축적의 시스템과 그에 의존하는 장소의존적 이해를 지키기 위한 경쟁으로 점차 내몰리고 있고, 그로 인해 장소의 영역화 경향은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의 영토분쟁도 이러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방식은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존재론적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구조주의적 입장을 인식론에까지 적용하게 되면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실천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해답을 제공하기 힘들게 된다. 즉, 자본주의 구조에 의해 주어진 장소의 영역화 경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실천적 주체를 하비의 논의 속에서 찾기는 매우 힘들다. 장소를 사회적 과정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계론적 장소관이 지니는 힘은 영역화의 경향을 바꿀 실천적 가능성을 이론에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장소의 모습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열어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의 측면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교육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구조, 권력, 제도, 관습 등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창조적으로 구상하고 그러한 미래를 구성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인을 기르는 것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관계론적 장소관을 지리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새로운 동아시아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인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 (2) ‘동아시아 지리’교육의 필요성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지리교육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영역적 배타성을 전제로 한 영토분쟁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지리교육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영토와 장소를 절대시하면서 국가라는 공간적 스케일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근대적인 국가중심적 세계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리교육의 구성과 내용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

근대적 사회과학에서 국가는 자기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영역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왔고, 이러한 국가의 영역성은 여타의 사회-정치-문화적 과정과 상관없이 이미 주어졌고, 고정되어서 불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국가의 영역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국가가 이 세상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국가중심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존 애그뉴(John Agnew)는 근대 사회과학의 이러한 전통적 인식론에 대해 비판하면서, 근대 사회과학이 ‘영역적 함정(territorial trap)’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통적인 근대 사회과학은 다음 3가지의 근거 없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Agnew, 1994). 첫째, 근대국가의 주권은 명확하게 경계 지워지는 영역적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 둘째, 국가 내부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사이에는 매우 엄밀한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영역적 국가는 근대 사회를 지리적으로 담아내는 그릇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세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근대 사회과학의 많은 이론들은 세계가 경계가 지워진 배타적인 영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실제로 이들 영토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끊임없는 갈등과 논쟁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즉, 애그뉴는 국가의 영역성을 조절(regulation)의 과정, 사회적 갈등, 정치적 투쟁 등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조절적 과정과 사회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배경이 되는 고정된 구조물이라고 인식하는 태도에 대해 ‘영역화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근대사회과학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한 공간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요구하는 지리학 분야도 ‘영역화의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서, 20세기 중반에 지리학 연구의 지배적인 위치를 점했던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 연구의 대부분은 국가라는 영토적 단위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로 하고 그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국가는 장소와 지역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한 단위가 될 수 있다. 특

히 자본주의가 중심적인 사회구성체로서 자리 잡고, 근대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배적인 정치적 질서로서 작동하고 있는 한, 현대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현상과 과정들이 국민국가라는 영역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통제·조절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근대국민국가의 영역성을 바탕으로 정의된 장소와 지역은 정치·경제·사회적 과정을 지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교육하는 데 중요한 단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국가 차원에서 규정되는 장소성과 영역성이 다른 공간적 스케일에서 규정되는 장소성과 영역성에 비해 훨씬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국가적 스케일 이외에도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형성된 장소나 영역이 존재할 수 있고, 이들 다양한 장소/영역적 공동체는 다양한 스케일의 네트워크망을 통해 연결된다는 사실이 지리교육 내용의 구성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게다가 앞에서 지적한 민족/국가주의적 영토교육, 유기체적 영토관, 본질주의적 장소관 등의 문제점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리교육의 재구성을 지향한다면, 국가중심주의적 관점에서 구성된 지리교육은 극복의 대상이다. 특히 국가적 스케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형성된 장소와 지역들이 복잡한 흐름과 이동의 네트워크를 통해 초국가적 스케일에서 구성해내는 네트워크의 공간을 중심으로 지리교육의 내용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지리교육을 위해서 ‘동아시아’를 이러한 네트워크적 공간으로 바라보고, 글로벌, 환태평양,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국가, 지방, 도시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구성되는 장소와 지역들의 네트워크적 장소성과 영역성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리’를 구성하고 이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분야에서는 이미 근대국가의 틀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국사’적 시각의 역사해석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국사적 시각의 역사해석을 비판해왔던 임지현(2005)은 “‘국사’의 배타적 논리는 인위적 ‘국경’의 경계 안에 그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하고 복

합적인 역사를 만들어나간 변경을 억지로 구겨 넣는다”(임지현, 2005: 12)라고 지적하면서, “근대 국민국가의 배타적인 영토적 경계를 정당화하는 ‘국경’의 개념적 주술에서 벗어나 ‘변경(border zone)’의 시선으로 볼 때, 현재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은 상호 이해와 호혜의 틀에서 점차 해소될 수 있다”(임지현, 2005: 2)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변경의 관점에 설 때, 독도, 대마도, 간도 등 분쟁의 대상인 변경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친근한 삶의 터전이자, 경쟁하면서도 다양한 삶의 경험을 나누던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 이해되고, “한국이나 일본이나는 배타적 질문에서 벗어나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양국의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독도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유산이 아닌 동북아 역사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머금은 미래의 유산”(임지현, 2005: 8)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동아시아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국가중심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스케일의 거시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서술한 저서가 출판되기도 하고(유용태·박진우·박태균, 2011), ‘국사’, ‘세계사’와 더불어 ‘동아시아사’가 2000년대 들어中等교육 정규과목의 하나로 채택되기도 했다.

역사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을 지리학자들은 본받아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제대로 된 이해와 설명, 그리고 교육을 위해 지리학자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이 모든 물질의 존재기본조건임을 상기할 때, 사회적 사건과 현상은 시간적 관점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점에 의해서도 설명되어야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즉,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시간적 관점과 역사적 상상력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없다. 시간적 연속성과 수직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서사와 사건과 과정들의 병렬적인 공시성, 수평적 상호작용 등에 초점을 두는 공간적 상상력이 동시에 작동할 때, 동아시아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강화는 근대국민국가의 틀로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동아시아 연구와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 4. 결론

이 글에서 필자는 최근 독도, 간도 등을 둘러싼 영토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각되고 있는 영토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영토분쟁의 상황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영토교육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리교육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특히 기존의 영토교육론은 민족/국가주의적 성향, 유기체적 국토개념과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적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배재와 포섭의 속성과 영토적 배타성을 강화하여 영토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긴장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문제제기 했다. 최근 이러한 민족/국가주의적 영토교육론과 거리를 두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적 애국주의, 비판문식성 교육, 초국가적 시민양성 등에 초점을 두는 영토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논의들 역시 영토교육의 틀 속에 갇혀 있는 한 민족/국가주의와 영토적 배타성의 논리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보고, 영토교육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는 영토교육을 넘어서 지리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자는 1) 관계론적 장소개념을 지리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 2) 국가의 틀을 넘어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지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근대국가의 관료와 정치엘리트층 중심으로 형성된 현실의 권력질서와 사회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기존 사회의 질서와 구조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여 현재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적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에만 매몰되면

학생들로 하여금 기존의 권력관계와 질서를 어떤 절대적 힘에 의해 주어져서 고정불변한 것으로 믿게 하여 체제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주체만을 양성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관련하여, 필자는 지리교육을 비롯한 사회과 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교육적 목적 중의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기획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적 능력을 키우게 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이상을 위해 사회에 참여하여 적극 실천하는 시민적 주체로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동아시아에서 영토분쟁을 극복하고 평화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정체성보다는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체 의식과 시민적 정체성을 지닌 주체들을 양성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현실적 질서와 권력관계를 뛰어넘어 대안적인 방식으로 동아시아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하여 진시원(2008)은 동북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구성하는 한 방법으로 중등 교육과정에 구성주의적 국제관계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는 현재 동북아 교육은 권력과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국가 중심주의와 현실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국가의 영토적 이해를 뛰어넘어 평화와 공존의 논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동북아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을 포함하는 일반 시민들도 평화로운 동북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체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성주의적 논리가 중등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진시원, 2008: 447).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 적극 동의하며, 국가의 안과 밖에서, 그리고 국가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다양한 힘과 과정들이 여러 다양한 장소와 스케일에서 만나고 섞이면서 구성해내는 동아시아의 지리를 교육하는 것이 국가의 현실적 영역성에 기댄 영토교육보다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 Abstract

Searching for an Educational Solution to Territorial Conflicts in East Asia: From  
Territory Education to an Alternative Education on East Asian Geography

Park, Bae-Gyoon

This paper, with a critical engagement with recently emerging discourses on territory education emphasizing the need to educate the issues of territorial identities and sovereignty to students, urges that a total re-formulation of geography education — instead of expanding territory education — is needed in order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efforts to resolve the current territorial conflicts, and develop more peaceful relation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at the existing territory education perspective — due to its nationalist orientation and its theoretical reliance on the organic conception of territory and the essentialist notion of place — is more likely to aggravate the territorial conflicts in East Asia. With growing concerns on the nationalist territory education, there have been recent efforts to develop alternative perspectives on territory education by emphasizing the notion of civic nationalism, education for critical literacy, and development of transnational citizenship. This paper, however, highlights that these efforts are still limited in overcoming the logics of territorial exclusiveness and thus not fully useful in developing a peaceful East Asia, as long as they are made under the name of territory education, and suggests to get rid of the frame of territory education. With this problem orientation, I argue that we need to make an effort to completely re-formulate the curriculum of geography education — instead of wasting our time and energy for territorial education — if we want to develop an educational curriculum that can

make a genuine contribution to the East Asian peace. More specifically, I suggest that 1) the developers of geography education curriculum needs to make more aggressive efforts to incorporate the relational conception of place into the contents of geography education, and 2) research and education on ‘East Asian Geography’ need to be much more strengthened in order to overcome the ‘territorial trap’ and ‘methodological nationalism’ inherent in the existing curriculum of geography education, which has been organized on the basis of two pillars of ‘Korean Geography’ and ‘World Geography’.

Keywords: territory education, East Asian geography, place, territoriality, nationalism territorial conflict.

## 참고문헌

- 남호엽. 2011. 「글로벌 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3), 371~379쪽.
- 박배균. 2008. 「한국에서 토건국가 출현의 배경: 정치적 영역화가 토건지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 《공간과 사회》, 31, 49~87쪽.
- \_\_\_\_\_. 2010. 「장소마케팅과 장소의 영역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498~513쪽.
- 박선미. 2007. 「인천의 장소만들기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3), 13~25쪽.
- \_\_\_\_\_. 2010. 「탈영토화 시대의 영토교육 방향—우리나라 교사와 학생대상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1), 23~36쪽.
- 서태열. 2009.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3), 197~210쪽.
- 유용태·박진우·박태균. 2011.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 2』. 창작과 비평.
- 이하나·조철기. 2011.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3), 332~347쪽.
- 임덕순. 2006. 「지리교육에 있어서의 영토교육의 중요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1~10쪽.
- 임지현. 2005. 「국민국가의 안과 밖—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역사논쟁에 부쳐」. 《인문연구》, 48, 1~18쪽.
- 진시원. 2008. 「동북아 영토분쟁. 중등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간도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2), 435~455쪽.
- Agnew, J. 1997. "The dramaturgy of horizons: geographical scale in the "Reconstruction of Italy" by the new Italian political parties. 1992~95." *Political Geography*, 16(2), pp. 99~122.
- Andrey, R. 1967. *The Territorial Imperative: A Personal Inquiry into the Animal Origins of Property and Nations*. London: Collins.
- Brenner, N. 2004.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ell.
- Delaney, D. 2013. 『영역』. 박배균·황성원 역. 시그마프레스.
- Dijkink, G. 1996. *National Identity and Geopolitical Vision*. London: Routledge.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Oxford: Blackwell.
- \_\_\_\_\_. 1985. "The geopolitics of capitalism." in Gregory, D. and Urry, J. (eds.). *Social*

-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Macmillan.
- \_\_\_\_\_. 1989. *The Urban Experience*. Oxford: Blackwell.
- Jessop, B., Brenner, N. &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pp. 389~401.
- Massey, D. 1997. "A Global Sense of Place." In Barnes. T. and Gregory. D. (eds.) *Reading Human Geography*, pp. 315~323, London: Arnold.
- Relf, E. 2005.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 Rose, G. 1993.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Cambridge: Polity Press.
- Sack, R. D. 1986.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rey, D. 2001. *Territory: the Claiming of Space*. London: Prentice Hall.